

8월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

본 자료는 입법현황과 정책 이슈 관련 언론 보도자료 등을 자체요약한 것입니다.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1-1.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그늘숲 법원' 선정	1
1-2. 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 SIREN' 시범 운영 시작	2
1-3. 어린이·청소년 국가예방접종 확대 추진	2
1-4. 세종 전의면 양곡1리, 햇빛소득마을 즉시추진 대상지 선정	3

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2-1. 보은군 청소년 꿈기움 바우처 지원 조례	5
2-2.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	6
2-3.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7
2-4.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8

3. 국회 입법 발의 현황

3-1~12. 지방자치 관련 국회 입법 발의 현황	10~15
-----------------------------------	-------

4. 국내 정책 정보 및 이슈

4-1. 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 'AI민주정부' 본격 추진	17
4-2.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18
4-3. 보건소-의료 취약지 'AI 시스템'이 돕는다	19
4-4.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에... 사립대들 "문 닫을 판"	20

5. 해외 정책 정보

5-1. 세계 최고의 공공조직은 어떻게 성과를 만드는가	22
--------------------------------------	----

0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1-1.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그늘숲 법원' 선정

- ㄷ자 배치와 3층 통합로비로 개방성과 법원 상징성 조화
- 하반기 설계 착수 거쳐 2031년 3월 개원 목표

- 경사진 대지를 따라 들어선 ㄷ자형 건물과 빛이 스며드는 중앙 로비, 시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공공간이 세종지방법원의 밑그림으로 정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반곡동에 들어설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그늘숲 법원'을 선정해 1일 공개했다.
- 당선작은 '경계 없이 열린 법원'이라는 구상을 공간 구성에 담았다. 대지의 높낮이를 살려 건물을 ㄷ자형으로 배치하고 중앙에는 중정을 둔다. 3개 층 규모의 통합로비에는 자연채광이 깊숙이 들어오도록 설계해 이용자가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법원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 행복청은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행복청 홍순민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이 미래형 법정의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 잡도록 개원 준비를 빈틈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 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SIREN' 시범 운영 시작

-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사이렌)'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사이렌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직접 개발한 점이 특징이다.
- 사이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13개 실무반에 임무카드를 자동 배정하고, 분석·예측 데이터를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또 초 단위로 재난 유형을 분류하고 문안을 자동 생성·전파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 이 플랫폼은 행정안전부 국가 AI 프로젝트에 선정돼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을 강화했으며 세종시 AI 혁신 경진대회에서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실제로 이달 집중호우 대응 과정에서 주민 대피 알림과 피해지역 파악에 활용됐고 8월 폭염 중대경보 발령 대비에도 쓰이고 있다.

출처 : 세종시청(<https://www.sejong.go.kr>)

1-3. 어린이·청소년 국가예방접종 확대 추진

-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백신을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감염병 관리 및 퇴치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 인플루엔자(독감) – 종전 : 어린이 대상 13세 이하까지
 변경 : 어린이 대상 14세 이하까지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종전 :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변경 :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 기대효과 : 백신 접종으로 유행 및 중증화를 예방.

1-4. 세종 전의면 양곡1리, 햇빛소득마을 즉시추진 대상지 선정

- 행안부 1차 공모서 즉시 추진 대상으로 꼽혀...전국 9곳
- 태양광 발전 수익 마을주민 공유...정부 컨설팅·금융 지원
- 세종시 전의면 양곡1리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즉시 추진 대상지로 선정되며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본격 나선다. 전의면 양곡1리가 전국 129개 신청 마을 가운데 사업 추진 역량과 주민 참여도 등을 인정받아 즉시 추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전국에서 즉시 추진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9개 마을에 불과하다.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유희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다.
- 전의면 양곡1리는 주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 계획, 안정적인 사업 기반 등을 인정받아 즉시 추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 이번 선정으로 양곡1리는 정부의 맞춤형 컨설팅과 금융상품 지원을 받게 되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와 공사, 사용 전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1년 6개월 안에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는 앞으로 전기사업 인허가 절차 이행,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의면 양곡1리 사업 선정을 계기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0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2-1.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 · 개정 이유

- 이 조례는 보은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인 꿈키움 이용권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4조(지원금액)

- ① 연령별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0., 2025. 12. 26.>
 1. 8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개정 2026. 8. 31.>
 2.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30만원
- ② 연령별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주요내용

-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
- 대상 연령의 폭이 넓음.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2-2.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

제 · 개정 이유

- 성년이 된 하남시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내 용

- 제4조(지원대상) 축하금 지급대상은 성년이 되는 해의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 ② 축하금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하며,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 ① 지급신청은 성년이 되는 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성인으로서의 자부심 부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 지원금액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공식 시정자료에 3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2-3.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개정 이유

- 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생아수의 50만원 배수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 8. 24.〉
 1.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군에 있을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출생신고 이전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4.〉
- ③ 지원 대상자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출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4.〉

주요내용

-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실제 거주자에 한함.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2-4.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개정 이유

- 이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전문개정 2021.10.15.]

○ 제5조(지급금액)

-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주요내용

- 우리시는 무연고자 장례 지원임에 반해 고성군은 연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급.

우리 시 관련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03

국회입법

발의현황

3-1.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폭넓은 의정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 현재 퇴직한 지방공무원, 경찰, 교육, 소방, 군인, 교정 공무원 등 주요 공직 퇴직자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단체를 설립·운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지방의원들의 경우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조직하였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자 : 문진석 / 발의일 : '26.08.05 / 의안번호 : 2220438

3-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 and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3-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풍수해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피해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 시설에 관한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3-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주거·교통·교육·의료 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대표발의자 : 신정훈 / 발의일 : '26.08.14 / 의안번호 : 2220593

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그러나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 규정은 집행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전문성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 매장에서 주민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임.
- 이에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또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인증 등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자 : 이춘석 / 발의일 : '26.07.23 / 의안번호 : 2220119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질문·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71조).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10월 29일로 지정된 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린 제9차 헌법개정일(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적 결정을 기념하는 데 치우쳐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주도성’이나 ‘풀뿌리 역사’를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하고, 그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주민이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대표발의자 : 최수진 / 발의일 : '26.07.31 / 의안번호 : 2220352

3-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촉진을 위한 공제로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제도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를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며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3-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사장의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 신설 등).

대표발의자 : 김준혁 / 발의일 : '26.07.27 / 의안번호 : 2220180

3-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구분상가들의 공실률이 80%~90%에 달하고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해당 소유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처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의 유지·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상권 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장기 공실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7 신설).

04

국내정책

정보이슈

4-1. 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 'AI민주정부' 본격 추진

- 내년에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 연계한 맞춤형 'AI국민비서' 통합 제공
 - 국민 의견-정책 연결 '모두의 광장' 구축...연말까지 47개 부처에 '온AI' 도입
-
-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AI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또 2027년부터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를 연계한 맞춤형 'AI국민비서'를 제공하고, 올해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온AI'를 도입한다.
 -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 'AI국민비서' 통합 제공
: 먼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 등을 연계해 2027년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AI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 AI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 구축
: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돌봄·고용·창업·위기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AI를 활용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 위험도 AI로 예측하여 신속 대응한다.
 - 국민의 유능한 정부 : 47개 중앙부처에 '온AI' 도입...공직사회 업무방식 전환
: 공직사회의 업무 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인 '온AI'를 활용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예산 검색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2026년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지원하고 공무원은 정책적 판단과 국민에게 필요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4-2.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 단기 육아휴직 8월 20부터 시~작!

○ 단기 육아휴직은?

-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업·휴교·휴원을 했을 때, 자녀가 방학 중일 때
 - 자녀가 질병·사고로 입원했을 때, 감염병으로 등원·등교가 중지됐을 때
- 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1주 또는 2주를 단기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Q1.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NO! 아닙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기간 연장 요건을(부모 각각 3개월 사용) 판단할 때도 포함돼요.

Q2. 분할사용횟수(3회)도 차감되는 건가요? NO, 차감되지 않습니다.

'26년 1차 일반 육아휴직 / 단기 2주 사용

'27년 2차 일반 육아휴직 / 단기 2주 사용

'28년 3차 일반 육아휴직 / 단기 2주 사용

'29년 4차 일반 육아휴직 / 단기 2주 사용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어요!

Q3.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만 쓸 수 있는 거죠? YES! 맞습니다.

1주 or 2주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하루 단위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일반 육아휴직을 7일, 14일 사용한다고 단기로 인정되지 않아요.

Q4.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나요? YES! 맞습니다.

첫째: '27년 1월에 사용 / 사유: 방학

둘째: '27년 5월에 사용 / 사유: 골절로 입원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4-3. 보건소-의료 취약지 'AI 시스템'이 돕는다.

- 섬·산간벽지 환자엔 '비대면 협진'... 응급 병원 선정 돕는 플랫폼 도입.

-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의료취약지 의원에 영상 판독 보조, 만성질환 관리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보급된다. 응급 환자의 적정 병원 이송을 돕는 AI 플랫폼도 올해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 전국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에는 'AI 솔루션 패키지'가 보급된다. 영상 판독을 돕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등 부족한 전문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서다. 의료취약지의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비슷한 기능의 '일차의료 AI 패키지'가 지원된다.
- 도서·산간 등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AI 기반 비대면 협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방문 간호사가 AI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 '응급실 뽕뽕이'를 막기 위해 AI가 적정 이송 병원 선정을 돕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도 도입된다. AI가 환자와 구급대원의 대화를 바탕으로 중증도를 평가하고, 심전도 등 생체 징후를 수집한 뒤 각 병원의 병상, 의료진 등을 분석해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는 식이다. 하반기 대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 영상과 진료기록을 병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그동안 병원을 옮길 때마다 CD로 영상을 복사하거나 같은 검사를 반복해야 해 의료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진료 예약부터 입퇴원까지 환자가 병원에서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를 AI로 지원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 시스템'도 개발된다.

4-4.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에... 사립대들 "문 닫을 판"

- 교육부,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 학생 등록금 무상화
- 2030년까지 4000억원 투입 예정...지역균형발전 목표

- 정부가 내년부터 국립대 신입생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무상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고사 위기를 맞은 지방사립대 등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7학년도 국립대 신입생 6만 4000명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모든 학년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II유형이 폐지되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족쇄가 일부 풀렸지만, 여전히 법정 인상 상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무상화까지 추진되면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 국립대 1~4학년의 연간 등록금 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르지만,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상당 부분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추가 소요 예산은 내년 1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0억원씩 늘어나 2030년에는 연간 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립대 무상화 정책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지만,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화만으로는 지역도, 대학도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이 지역에서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고려하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립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장학금 등을 확대해 무상화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5

국외정책

정보이슈

5-1. 세계 최고의 공공조직은 어떻게 성과를 만드는가

- 서류를 다시 내지 않는 나라 에스토니아
 - AI데이터 연결로 행정 시간 줄인 디지털 정부
- 행정서비스 99%를 온라인으로 바꾼 나라
 - 에스토니아는 세계를 대표하는 디지털 행정 국가로 꼽힌다. 2024년 말 모든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혼인과 이혼도 신청 절차가 온라인화됐으며, 개인의 온라인 세금 신고에는 약 3분이 걸리고, 기업도 통상 2~4시간 안에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한 번 낸 자료는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
 - 부처와 기관이 기본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시민과 기업은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제출할 필요가 줄었다. 공무원도 부서마다 비슷한 서식을 반복 작성하거나 같은 자료를 다시 입력하는 비효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전자화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연결이다
 - 종이 없는 행정과 전자결재가 예외가 아니라 기본이 되었고, 민원인은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서비스를 처리하는 원스톱 경험을 얻었다. 공무원은 반복 입력과 단순 처리에 쓰던 시간을 줄였고, 결국 빠른 행정은 친절함 직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같은 데이터를 다시 만들지 않게 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 **한국 지방정부에 주는 시사점**
 - 시스템이 느리면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민원인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서별 중복 보고서와 중복 입력 항목을 줄이는 것이다. 한 번 입력한 자료를 여러 부서가 함께 쓰고, 같은 증빙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행정 데이터의 연결 기준을 세워야한다.

